

34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청년에게 ‘재벌개혁’이란?

박 상 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청년에게 '재벌개혁'이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01

한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헬조선”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현재도 고단하고 미래도 암울하다.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 지옥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원해서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장에 취업해도 ‘내 집 마련’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요원하다. 결혼도 늦추게 되고 아이를 가지는 것도 망설여진다. 50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조기퇴직과 노인 빈곤이 아른거린다. 50대에 퇴사해 손에 쥘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대부분 3년 안에 망하게 된다.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은 축복받은 소수이고, 다수의 노인은 “일자리가 복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러니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좋은 공무원이 청년에게 가장 선망되는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¹ 공무원 다음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그 다음이 대기업 순으로 원하는 직장이 정해진다.

한국사회가 청년에게 헬조선이 된 것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 이런 구조적 요인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표출된다. 양극화란 다음 세 가진 조건을 성립하는 특정한 형태의 불평등 상태라고 할 수 있다.² 첫째, 사회의 실질적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파워 엘리트(Power Elite)들에게 경제적·정치적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들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에 필요한 자원도 부족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계층이동이 사실상 어려워져 이런 불평등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는 상태이다.

양극화를 이처럼 이해한다면, 소득 불평등만으로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단지 소득 집중수준으로만 측정할 수는 없다. 재벌 총수들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에 황제경영을 할 수 있는 소유지배구조 아래에서, 재벌 총수의 영향력을 5% 지분 가치로 또는 이 지분에서 발생하

1) “취준생 10명 중 4명 공시생... 대학생 거의 절반이 휴학 경험”. <연합뉴스>. 2016.07.21.

2) 박상인. 2017.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는 배당수입으로 측정하는 것은 난센스(non-sense)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상위 1%가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책적 수단은 사실 한국 재벌 총수들의 영향력이나 수단과 비교하면 미미하기까지 하다. 한국의 파워 엘리트의 핵심을 구성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시사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상위 재벌로 진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양극화 판단의 한 축인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 확대와 계급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둘째,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상용직과 자영업자 및 미취업자의 소득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소득 수준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정체 또는 하락하기 시작하고,³ 취약계층의 계층 상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⁴ 이런 격차의 확대와 계층의 고착화의 근본적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약자의 재산권 보호의 미비 그리고 복지 및 사회안전망의 불비에 있다.

결국, 한국의 경제 구조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출신을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 아래서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나 사회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게 된다.

3) “[더 커진 소득격차] 123만8000원 Vs. 932만4000원.. 가계 소득 격차 통계 작성 이래 15년 만에 최악”. <파이낸셜 뉴스>. 2019.02.21.

4) “SKY캐슬은 현실” 개천용지못 보면 안다”, <중앙일보>, 2019.02.25.

02

왜 재벌개혁인가?

1)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의 구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매우 높은 제조업 비중이다.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을 기초로 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였고, 제조업 부문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경제블록을 생성했다. 이런 재벌체제에서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만연한 기술탈취는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중간재 사업자들이 기술혁신에 매진할 유인을 박탈하고, 고만고만하고 대체 가능한 기업으로 전략한 중간재 하청업자들은 또다시 단가 후려치기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따라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할 유인도 여력도 없게 되며,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경쟁으로만 내몰린다. 중소·중견 기업의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렵잡아 말하자면, 하청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가능하고 또 동시에 기술탈취가 어려운 B2C (Business to Consumer) 분야에서는 우리 경우에도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 나가는 신생 혁신기업들로 네이버, 카카오,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인터넷게임업체, 화장품 회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B2C 업종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내부거래와 하청 산업인 B2B (Business to Business) 분야에서는 혁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쟁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과거 미국에서도 있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3사가 담합 구조를 유지했는데, 이런 담합 구조하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들도 전속 계약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담합과 전속계약 체제로 인해 1960년대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혁신이 사라지게 되었고, 1970년대 일본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 현지 공장을 짓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완성차회사와 부품 생산자 간에 전속계약의 관행이 깨졌고, 부품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미국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생산성이 빨리 회복되었다. 미국 자동차부품산업에 혁신

이 일어나면서 결국 미국 완성차들도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⁵

단가 후려치기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에는 가격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 2015년까지 현대자동차가 단가 후려치기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은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의 매출액 구성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의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된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중 살펴보면, 현대자동차는 재료비에서 폴크스바겐보다 12%포인트 이상의 비용 우위를 보인다. 자동차업체의 재료비는 부품과 냉연강판 같은 소재성 재료로 구성되는데, 냉연강판 같은 소재는 국제시세가 있으므로 특별한 가격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재료비 차이는 대부분 부품단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부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재료비 절감이 현대자동차 경쟁력의 주요 요인이었다.⁶

그러나 이런 단가 후려치기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재벌 대기업에도 결국은 독이 되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로 손쉽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벌 대기업은 혁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유인이 없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전속구매 상대인 국내 하청 기업은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도 여력도 부족해지고, 따라서 부품이나 소재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개연성도 낮아진다. 결국, 일정 시점이 지나면 최종재 생산자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외 협력업체를 뒤늦게 찾아 나서게 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전 세계적 탈 수직계열화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과 최종재 생산자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산업구조의 진화과정⁷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현재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 출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2018년 1분기 적자를 냈고, 건설했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⁸ 2018년 1분기 상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사(66.7%)는 적자로 전환했다. 89개사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8.6% 줄었으며 영업이익률은 0.9%에 그쳐 2017년 1분기 3.7%에 비해 2.8%포인트나 감소했다. 총 28조원 규모인 자동차산업 여신 중 1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인 2차·3차 협력업체는 이미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에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리하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 이어 다이내맥, 금문산업, 이원솔루텍 등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상태이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는 나아가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가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대기업과 중

5) Rajan, Raghuram and Luigi Zingales. 2004.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전국금속노조울산지역공동위원회. 2015, 『원하청 불공정거래 실태 및 대안』.

7) Herrigel, Gary. 2010. Manufacturing Possibi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8) “車산업 생태계 급속도로 무너져…부품업체 출도산 위기”. <연합뉴스>. 2018.10.19.

소기업의 임금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추론은 현대자동차의 1차와 2차 비계열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2015년에 발표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실태 및 대안』이라는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 등 공시 및 확정된 자료를 이용해 1차와 2차 비계열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별도로 계산해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이 3조 이상인 1차 협력사인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기아차와 그 추이가 비슷하나 현대기아차의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협력사 중에서 중기업은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현대기아차 대비 평균 40%에서 50%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2009년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악화될 때에는 동조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2차 협력사(2차 밴더)의 영업이익률 추이는 현대기아차의 추이와 관계없이 현대기아차의 30% 수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가인하 압력을 받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이를 전가해 단가인하를 압박하나,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2차 협력사는 사업을 다변화하기 어렵고 장기간 전속거래 과정에서 1차 협력사의 원가 기준에 맞추어 생산함에 따라 2차 협력사의 원가 내역이 노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청사업자인 완성차 회사의 단가인하 압력의 대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와 2차 협력사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이들 협력사의 임금 격차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노동자의 고용 형태별로 평균 임금 수준을 보다 세분해서 분석한 이병훈·유형근(2009)⁹의 연구에 따르면, 비계열 1차 협력사의 평균 임금은 완성차회사의 64~77%, 1차 협력사의 사내 하청은 약 51%, 2차 협력사의 경우 27.4%에 불과하다.

2) 재벌개혁, 어떻게 할 수 있나?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개혁이 바로 공정경제의 확립을 의미하며,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 재벌개혁, 갑·을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먼저, 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 징벌배상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부과해야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기술을 탈취

9) 이병훈·유형근. 2009. "자동차산업의 임금결정메커니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3(2), 1-24.

한 기업에 대해 그 기업 매출액의 10%를 징벌배상의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이 (법원의 허가 하에) 형사재판의 검찰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지배주주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MoM (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이 바람직한데, MoM 규칙은 주총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을 의미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MoM 규칙을 적용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이해 상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11조에 신설항(11조의 5)을 삽입하거나 거래소 상장 규칙을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상장 규칙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총수 일가로서 임원의 보수에 대해 상법에서 MoM 규칙을 두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금지도 필요한데, 의결권을 매년 10%, 5%씩 제한을 강화하면서 3년 안에 금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또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때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고, 회사가 분할이나 분할 합병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셋째,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지주회사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규제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일관된 기업집단 출자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013년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과 지주회사규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내용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 단절된 제조업의 진화가 복원될 것이다. 물적 자본, 재벌 대기업, 가격 경쟁력 중심의 제조업 구조가 인적자본, 중소·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는 많은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된다. 인적자본 중심,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독일의 제조업 고용창출 능력은 한국의 1.2배인데, 경제 구조가 독일식으로 바뀌면, 한국 제조업에서 많게는 1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생기면 생산력 향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원청기업과의 협상력도 높아짐으로 임금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같이 올라갈 것인데, 취업현장에서 보면 구직자들은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는 임금 양극화 문제나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고부가가치화의 핵심인 중간재 산업이 취약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반도체 업계 상장사 166곳의 2018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¹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평균 39.1%였으나, 반도체 장비업체는 13.5%에 그쳤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빼면 흑자 보는 곳은 거의 없으며, 지난해 82개 반도체 장비업체 중 13곳이 적자를 봤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1%에 불과하며, 소재 업체도 9.9% 수준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은 18.2%에 불과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장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인데,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액의 70%는 장비값으로 쓰이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30조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면 장비를 사는 데 21조원을 쓰는데, 이 중 16조원을 해외 업체가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런 반도체 후방산업인 장비·부품·소재 산업의 미발달로 인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국내 경제로의 낙수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건실한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이 많아져야만 반도체 전공자도 늘어나고 인력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양극화 해소와 계층 이동성 제고는 공정한 경쟁과 최소한의 인격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며, 이런 기본적인 구조 아래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력을 더 하면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 연금의 정상화와 자영업 문제를 연계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으므로, 기업 연금을 정상화하여 3층 구조의 연금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 강화는 노인 빈곤이나 자영업 몰락을 방지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10) “반도체 잘나가도…한국 장비업체 82곳 중 13곳 적자”, 〈중앙일보〉, 2018.10.15.

03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나?

촛불시민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포함한 근본적 경제개혁에 나섬으로써 촛불시민 운동을 촛불시민 혁명으로 승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까지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썩스러운 너무나 미약한 방안이다. 이는 정치권에만 개혁을 맡겨두어서는 결코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을 재인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먼저, 상법개정안의 핵심 요소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출에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들 조항이 입법화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들 조항이 입법화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1~2명 선출되더라도 이사회는 여전히 총수 일가 측의 이사가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보다는 총수 일가가 좀 불편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아마 거기까지가 다일 개연성이 높다. 우리와 비슷하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에서 독립적 사외이사를 강화했던 인도나 이스라엘도 2000년대에 들어와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MoM 규칙을 도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더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는 거리가 먼 개편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2018년 6월에 발표한 내부거래, 공익법인, 지주회사 실태확인에서 보고된 문제점들조차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부개정안은 사익편취 대상 상장기업의 범위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회피 가능성과 대한항공 사례에서 볼거진 부당성 요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이유이다. 한편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정제도와 출자단계 개선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나아가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기존순환출자 규제도 신규 지정 그룹에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오직 삼성 재벌을 위해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한도

5% 제한도 포기했으며,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데 대책도 빠져있다.

04

‘현재’를 바꿔야 청년의 ‘미래’가 열린다

재벌개혁이 시행된다고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과 같은 재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¹¹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부문으로 계열 분리될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자동차와 제철 중심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것이며, 문어발식으로 다각화된 사업 부문의 정리도 이뤄질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이들 거대 기업을 지배하는 삼성 재벌과 현대차 재벌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력 집중은 약화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계열 분리 등으로 ‘경제력 집중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완화되고, 특히 문어발식 다각화는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많은, 더 전문화된, 더 작은 규모의 재벌들이 생성될 것이다.

경제력 집중이 완화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으로 인해, 황제경영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이 잘 되는 것만이 총수 일가가 축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세습이 불가능해지면서, 재벌총수 일가는 특정 기업에 전 재산을 집중투자 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이사회를 통해 감시하는 역할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¹².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뤄지면서 기술탈취는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기술력을 가진 중간재 생산자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교섭력도 증대될 것이다. 갑을의 하청 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대체할 것이다. 기업이 잘 되는 것 외에는 축재할 방법이 없어진 총수 일가는 내부거래와 수직계열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탈 수직계열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중견·중소기업들에게 줄 것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벤처 성공 신화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기술탈취가 어려워진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이는 다시 벤처와 벤처캐피털이 융성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특정 기업에 전 재산을 집중투자하는 위험을 회피하고, 벤처캐피털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

11) 이 장은 박상인(2017.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의 일부를 발췌, 수정함.

12) “대기업 CEO 평균 재임기간은 2.6년 ‘단명’”. <연합뉴스>. 2014..07.30.

화하는 재벌 3세, 4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민간 벤처캐피털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등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중소·중견기업에도 오랫동안 종사하면 좋은 기업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더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들의 취업도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또다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청년이 더 빨리 직장을 잡고 주거와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기업연금을 운용할 연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경영보다 대주주로서 감시 역할을 선택할 대주주까지 등장하면서, 전문경영인도 재벌총수도 전횡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날 것이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경영인이 되는 것이 기관투자자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와 부합되고, 결국 그런 최고경영인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출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CEO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CEO를 꿈꾸며 대기업 취업하고, 성공한 중소기업인을 꿈꾸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벤처 신화를 꿈꾸며 창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인기는 시들어질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이 연금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내게 되고, 자영업에 대한 진입은 줄어드는 대신에 연금생활자의 증가로 자영업 분야에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영업을 해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올 것이다. 무너진 경제활동의 생애주기가 정상화되고,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고, 퇴직은 안락한 노후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와 경제는 더욱 다원화될 것이고, 이런 다원화된 사회와 경제는 언론의 중립성·독립성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다.

2016년 4월 IMF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7,195달러로, 일본의 78% 그리고 미국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고,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에서 한 국가의 총생산량은 자본, 노동, 기술, 그리고 제도의 함수로 표시된다. 재벌개혁과 포용적 시장경제로 이행은 바로 제도 혁신이다. 제도의 혁신은 기업 수준에서 기술혁신을 유발하고, 기술혁신은 인적자본과 물질 자본의 축적을 유발하면서 고용이 늘고 소득은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는 제도 혁신을 통해 성장할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재벌개혁은 현재를 바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를 여는 한국경제와 사회 개혁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절망, 냉소, 포기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지 말라!

그것은 청춘의 특권과 청년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청년에게 ‘재벌개혁’이란?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